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 7000억 달러, 세계 5위 목표”

산업부, 2024 업무계획 발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350억 달러
작년보다 수출 8.5% 성장 추산

10대 전략시장, 30대 품목 선정
수출 다변화·역량 확대 등 추진
250조 규모 무역보험 제공키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삼성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 대비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

한 기동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

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 수치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보다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

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 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작년 국세수입 344.1조 ‘56.4조 세수펄크’

기재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예산대비 법인세 23%, 소득세 12% ↓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 줄어듦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 9000억 원)에 비해 51조 9000억 원(-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인 400조 5000억 원에 비해서는 56조 4000억 원(-14.1%) 줄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두 전년 대비 쪼그라들었다.

소득세(115조 8000억 원)가 전년대비 12조 9000억 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7조

6000억 원)가 14조 7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21조 4000억 원)도 2조 5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예산 대비로 16조 원(-12.2%)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12조 2000억 원)가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80조 4000억 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24조 6000억 원(-23.4%)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3조 8000억 원)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 9000억 원(-9.6%) 덜 걷혔다. 예산보다는 9조 4000억 원(-11.3%) 줄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 8000억 원)도 3000억 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 3000억 원)는 3조 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 3조 4000억 원(-32.0%) 덜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4조 6000억 원)는 전년 대비 2조 2000억 원(-32.4%), 예산보다

1조 1000억 원(-19.5%)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조 1000억 원)는 전년보다 2000억 원(-3.5%) 감소한 반면, 예산보다는 1조 1000억 원(22.2%) 늘었다. 전체 세목 중 교육세(5조 2000억 원)만 전년보다 5000억 원(10.9%)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022년보다 41조 7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 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 4000억 원, 법인세 1조 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 4000억 원, 기타 2조 8000억 원 등 총 10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한 367조 3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월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보면 민간 소비가 1%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작년 제조업생산 25년만에 최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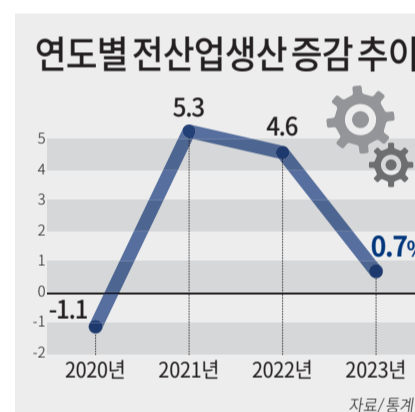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반도체 등 수출부진, 제조업 타격
전산업생산은 전년비 0.7% 증가

지난해 산업 생산이 2022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동반 감소했는데 특히 소비가 20년 사이 최대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0.7%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1.1%) 첫 감소를 기록한 뒤 2021년(5.3%), 2022년(4.6%), 2023년(0.7%) 등 3년째 증가를 거듭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크게 줄어 전산업 증가 폭이 1% 미만으로 둔화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6.4%) 이후 최근 25년 사이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차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에서 크게 줄어 들었다. 제조업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는데, 이 또한 1998년(-6.5%) 이후 25년 사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구은행, 이르면 1분기 ‘시중은행’ 전환

▶▶ 1면 ‘대구銀 시중은행’서 계속

강 과장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가내용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경영관련 세부 심사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심사요건이 타당하지 점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직원 위법행위, “인가 영향 없어”
아울러 인가절차에서 예비인가는 생략 가능하다.

은행업을 인가하는 경우 통상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치는데, 예비인가

는 본인가 전 대주주,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등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업을 영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은행도 최소 자본금(1000억원), 지배 구조(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대주주 적격성 등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인가신

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의 임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바 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주주의 형사소송과 다른 문제로,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 과장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바이오기업 자금난, 상반기로 이어질 듯”

▶▶ 1면 ‘주담대 못 갚아’서 계속

김 대표는 보유주식 총 200만주를 장내 매각했고, 지분율은 18.54%에서 9.79%로 떨어졌다.

파랩신은 지난해 창업주인 유진산 전 대표가 유콘파트너스에 지분을 넘겼지만 직후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유콘파트너스 지분 대부분이 장내 매도되는 수모를 겪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타이어뱅크가 파랩신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인수 금액은 고작 5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약산업 전략연구원 정운택 원장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투자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시작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난은 상반기중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투자 유동성 해소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낙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바이오 업계의 경영권 변화와 인수합병(M&A)에 대한 이슈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신사업에 뛰어들려는 이종산업군의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난 돌파를 위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제휴를 하는 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종산업의 기업이 신약 개발 생태계나 환경들을 얼마나 이해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